

현안과 과제

■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 한중 해빙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목 차

■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 한중 해빙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1. 개요	1
2. 한중간 주요 현안 점검	2
3. 시사점	1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동북아연구실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외 3인 (02-2072-6225, hzz72@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 한중 해빙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 개요

그동안 사드갈등 여파로 이어져 왔던 한중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최근 해빙기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갈등이 완전 해소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후 한중간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중단 등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 양국간 외교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드갈등 양상이 봉합된 상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간 주요 현안 점검을 통해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변화될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중간 주요 현안 점검

한중간 주요 현안은 수출, 직접투자, 통화협력, 인적 및 문화교류,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등 5개의 경제부문과 북핵 문제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부문

(수출) 對 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중간 교역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고 있다. 2017년 1~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 비중은 16.5%로 지난 2008년 11.7%에 비해 급증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보면 한중 모두 양국간 고위 기술품목 중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對한국 고위기술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對中 고위기술 품목 수출도 동기간 20.6%에서 43.7%로 급증하고 있다.

(직접투자)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對 한국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11~2017년 누적 63.4억 달러이다. 이는 동기간 중국의 對 한국 전체 직접투자 금액의 67.6%에 해당하는데, 중국의 對 한국 투자형태는 그린필드형 직접투자가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의 對 중국 투자 대부분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국가들의 對 중국 투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 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개정된 '외국인투자 지도목록'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였다.

(통화협력) 상호 개방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무역결제에 활용하면서 경상거래 시 원화와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여왔다. 한중간 맺고 있는 560억 달러(36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전체 통화스와프의 11.8%, 한국 전체의 45.8%에 달한다. 2012년부터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한국 기업의 對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한국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對 중국 교역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2년 0.7%에서 2016년 5.3%로, 원화의 결제비중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인적 및 문화교류) 질적 교류 모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방한 중국인은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더욱이 2017년 1~9월 누적, 국내 서비스 및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배, 1.7배 급증하는 등 문화콘텐츠 부문도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지속되면서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가 급감했다.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상대적으로 개방정도가 낮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는 36.6점으로, 한국, 일본, EU 20개국보다 높아 서비스 무역의 개방정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더욱이 한중 간 FTA의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됨에 따라 관광 등 부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이 아직 서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은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했던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65개 (41.9%) 분야는 한국에 대해 개방하지 않은 상태다.

(2)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 사안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재확인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한중 정상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첫째, 한중간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는 對 중국 전략 마련과 동시에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모색하는 두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보호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및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중 간 금융부문의 역내 협력을 통해 환율안정을 모색하고 나아가 점차 양국 간 상호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광 등 인적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개념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여섯째,**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의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정책 추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1. 개요

- 그동안 사드갈등 여파로 이어져 왔던 한중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최근 해빙기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갈등이 완전 해소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한중간에는 지난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양국간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어 오다 최근 외교적 합의에 도달
 -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3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중단 등 한중간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어옴
 - 하지만, 2017년 10월말, 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 사드갈등 양상이 일단 봉합됨
-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방중(訪中)으로 한중 화해모드가 가시화 될지가 주목
 - 12월 1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1992년 이후 10번째 양자간 단독 회담의 의미가 있음
 - 이번 방중은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 등 양국간 경제적 관계 재정립뿐 아니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자간 의견 조율이 예상됨
- 본 보고서는 한중 간 주요 현안 점검을 통해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변화될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의 시기별 방중 일지 >

구분	한중 정상	주요 이슈
1992. 9	노태우 대통령 양상훈 주석	- 한국 국가원수로 최초의 방중
1998.11	김대중 대통령	- ‘협력적 동반자 관계’ 선언
2001.10	장쩌민 주석	- ‘전면적인 협력 관계’ 구축
2003. 7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2008. 5	이명박 대통령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
2012. 1	후진타오 주석	- 한중 FTA 협의
2013. 6	박근혜 대통령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2015. 9	시진핑 주석	- 9-19 공동성명 및 유엔안보리 관련 이행 문제
2017.12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 북핵 문제 조율 등 주요 현안 논의 예상

자료 : 내외신 언론 종합.

2. 한중간 주요 현안 점검

□ 경제 부문

① 수출 : 對 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을 모색

- 한중간 교역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의 對 아세안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한중간 교역이 소폭 감소

-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對 중국 수출/한국의 총수출)는 2017년 1~10월 누적 기준 24.1%로 2016년 연간 25.1%보다는 낮은 수준
- 또, 중국의 對 한국 수입 비중이 동기간 9.6%로, 2016년 10.0%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한중간 교역이 소폭 감소

- 이에 따라, 중국을 대체해 아세안¹⁾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고 있음

- 2017년 1~10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 비중은 16.5%로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對 베트남 수출 비중이 동기간 8.3%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중국을 조금씩 대체하는 양상을 보임

< 한중 교역 현황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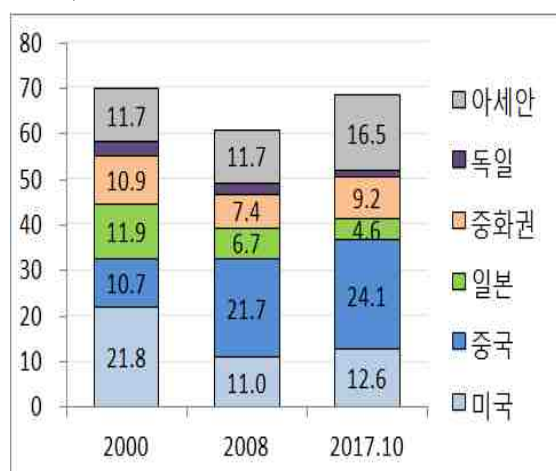
(비중,%)



자료 : 무역협회, CEIC.

< 한국의 주요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

(비중,%)



자료 : 무역협회.

주 : 중화권은 홍콩, 대만을 의미.

1) 아세안(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을 말함.

○ 한국의 對 중국 수출 품목 중 부품 위주의 중간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 간 고위기술 품목 중심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가공단계별로 우리의 對 중국 수출 중 부품 비중이 대부분

- 우리의 對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비중이 2000년 각각 84.9%, 14.7%에서 2016년 각각 73.9%, 25.7%로 중간재는 소폭 줄고 최종재는 늘어남
- 다만, 자본재는 동기간 9.9%에서 20.0%로 급증했으나, 소비재는 동기간 4.8%에서 5.6%로 소폭 증가에 그침
- 한편, 중간재 가운데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 2000년 19.7%에서 2016년 40.9%로 대폭 증가한 반면, 반제품은 동기간 65.2%에서 33.1%로 감소

- 기술수준별로는 한중 모두 양국간 고위 기술 품목 수출 비중이 급증

- 한중 양국간 기술수준별 수출은 중·저위 기술 품목보다는 고위기술 품목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중국의 對 한국 고위기술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급증
- 또, 고위기술 품목의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도 2000년 20.6%에서 2016년 43.7%로 급증하면서 양국간 고급화 수출 형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가공단계별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 >
(비중, %)



자료 : 무역협회, CEIC.

< 기술수준별 한중간 수출 비중 >
(비중, %)



자료 : 무역협회.

② 직접투자 : 첨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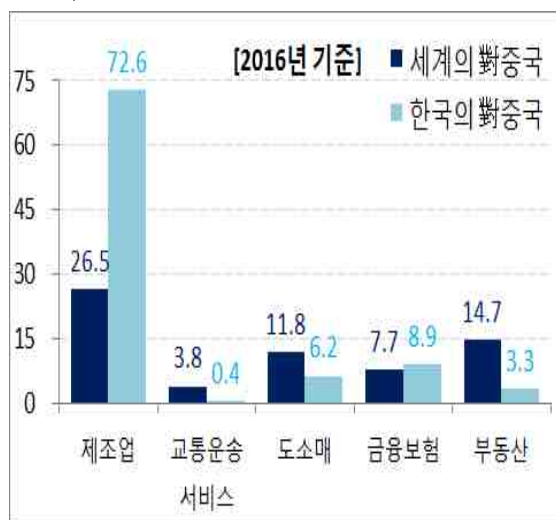
○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그린필드(Green Field, 신설투자) 유형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 편중이 심화

- 중국의 對 한국 투자는 우리나라의 부지를 직접 매입해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그린필드(GF)형 직접투자가 대부분임
 - 중국의 對 한국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05~2010년 누적으로 9.9억 달러에서 2011~2017년 누적 63.4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 ※ 건별 1억 달러 이상만 집계
 - 이는 동기간 중국의 對 한국 전체 직접투자 금액의 90.8%, 67.6%에 해당하며, 동시에 중국의 對 세계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1.6%, 3.6%에 해당함
- 반면, 우리의 對 중국 투자 대부분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국가들의 對 중국 투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세계의 對 중국 직접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26.5%에 그친 반면, 부동산(14.7%), 도·소매(11.8%)등 서비스의 비중은 70.2%에 달함
 - 반면,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72.6%에 달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국가들의 對중국 투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중국의 對한국·세계 직접투자 추이 > (억 달러)



< 한국·세계의 對중국 업종별 투자비중 > (비중,%)



자료 :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HRI 재구성.
 주1) 건별 1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 기준.
 2) 2017년은 6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 중국상무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HRI 재구성.

○ 더욱이, 중국은 자국 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는 추세임

- 1995년에 처음 제정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장려·제한·허가·금지 업종으로 구분, 2017년부터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함
 - 중국은 자국 산업구조개편에 맞는 외투기업 유치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1997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1차 개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을 거침
- 최근 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집적도가 높은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적극 장려하고 투자제한을 완화
 - 2017년 개정안에서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신재료, 고기술 설비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목록을 2015년의 38에서 35개로 축소하고 금지업종은 기존의 36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시킴
 - 특히, ‘외국인투자 지도목록’에서는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금지업종과 지분 제한업종 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

< 중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주요 내용 >

분야	1995년 (제정)	2002년 (2차 개정)	2015년 (6차 개정)	2017년 (7차 개정)
장려 업종	• (172개) 황무지 개발, 교통 인프라, 전자일렉트로닉스 등	• (262개) 발전설비제조업, 제어계측기계 제조, 일반상품 도소매, 정보컨설팅 등	• (349개) 통신위성설비, 항공기부품, 에너지 절약기술 창업투자 등 -이중 지분제한 업종 19개	• (348개) 스마트 응급의학 설비 제조, VR·AR 설비제조, 3D 프린터 핵심 부품 제조 -지분제한 업종은 네거티브 리스트로 편입
제한 업종	• (107개) 가전제품, 자동차, 은행 등	• (75개) 정유공장 경영, 수신기제조, 교통운수, 토지개발, 금융리스, 법률자문 등	• (38개) 종자산업, TV 프로그램 제작, 도로교통, 은행·증권사·보험사(지분제한) 등	네거티브 리스트 • (35개, 지분제한) 선박 설계제조, 해상운송,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지 업종	• (31개) 우편, 전신, 마스크, 무기 생산 등	• (34개) 희토류채굴, 송전망 건설, 신문사, 선물(금융) 등	• (36개) 무기생산, 담배생산·판매, 서류배송업, 신문사 등	• (28개) 희토류 채굴, 사회조사 서비스, 출판, 음반, 영화 등
허가 업종	•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업종	• 2002년 2차 개정안부터 허가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음		

자료 :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商務部.

③ 통화협력 : 상호 개방과 협력 확대

○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통해 무역결제에 활용하면서 경상거래 시 원화와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여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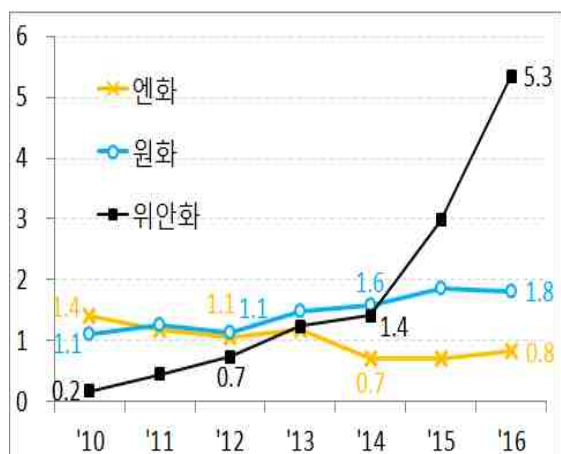
- 한중 양국은 상호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음
 - 한중간 맺고 있는 560억 달러(36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전체 통화스와프의 11.8%, 한국 전체의 45.8%로, 상호간 이득이 되는 금융협력임
 - 2012년부터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한국기업의 對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 한국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기 시작
 - 양국 간 경상거래에서 원화·위안화 사용이 많아질수록 달러환전 필요성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결제비용도 절감되고 환 리스크도 줄어들게 됨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무역결제에서의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의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對 중국 교역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결제비중이 높아졌음
 - 한국의 對 중국 교역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함
 - 특히,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2년 0.7%에서 2016년 5.3%로, 원화의 결제비중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남
 - 이는 우리기업의 국내 본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기업 내 무역 (intra-firm trade)에서 위안화의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임

< 한중 간 통화 스와프 규모 >

중국 (억 위안)	한국 (억 달러) * 달러환산액
1위 : 홍콩 4,000 (13.1%)	1위 : 중국 560 (45.8%)
2위 : 한국 3,600 (11.8%)	2위 : CIMM 384 (31.4%)
3위: 영국, ECB 각각 3,500 (각각 11.5%)	3위 : 인니 100 (8.2%)
총 32개국, 3조 510억 위안 (4,600억 달러 규모)	총 6개국, 1,222억 달러

자료 : 中國人民銀行, 기재부.
주 : CIMM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 한국의 對 중국 교역에서 결제통화별 비중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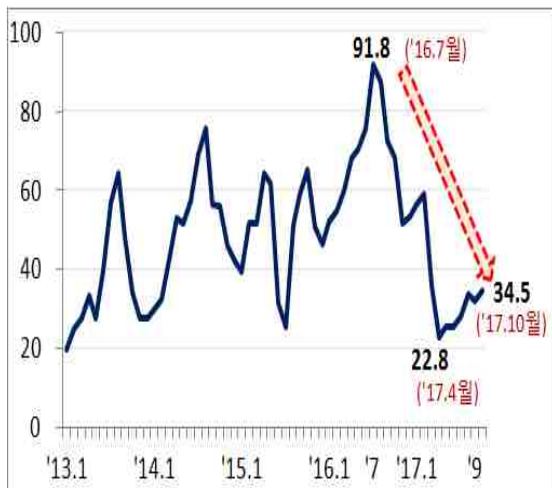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④ 인적 및 문화교류 : 질적 성장 모드로의 전환 준비

○ 올해 3월부터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²⁾가 시행되면서 관광산업 손실이 있었고, 문화·콘텐츠 부문도 지난해부터 '한한령(限韓令)'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

- 올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방한 중국인 전년 대비 60% 감소
 - 2017년 3월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3~10월 사이 방한 중국인은 238만 명으로 2016년 동기간 595만 명에 비해 약 60%가 감소
 - 아직까지 한국 단체 관광상품 금지 해제 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차츰 허용될 것으로 기대됨³⁾
- 더욱이 문화콘텐츠 부문도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한령이 지속되면서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가 급감
 - 2017년 1~9월 누적, 국내 서비스 및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배, 1.7배 급증
 -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수지도 2017년(1~9월 누적) 2억 4,38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4억 830만 달러보다 약 40% 감소

< 월별 방한 중국인 추이 >
(만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 국내 서비스 및 여행수지 현황 >
(백만 달러)

구분	서비스 수지			
	여행	음향·영상		
2015	△ 149.2	△ 100.6	244.9	
2016	△ 176.1	△ 94.3	510.3	
'17 1-9월	(A)	△ 134.9	△ 71.6	408.3
	(B)	△ 242.6	△ 122.5	243.8
B/A(배)	1.8	1.7	0.6	

자료 :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2) 2017년 3월 15일부터 중국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및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조치를 시행.
3) 2017년 12월 3일 중국의 한한령 이후 최초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방한한 것으로 나타남(연합뉴스, 2017.12.4).

⑤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 적극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 모색

○ 한중 양국이 아직 서로 최혜국대우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중국의 서비스 무역 개방정도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

- 중국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는 36.6점으로, 한국, 일본, EU 20개국보다 높아 서비스 무역의 개방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은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원격교육, 원격진료 등)에 해당하는 mode 1,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자회사/지사 설립에 해당하는 mode 3의 개방수준이 모두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음
- 기존의 양국 간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됨에 따라 관광 등 부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임

- 중국은 2015년의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 한국 측에 R&D서비스, 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등 업종을 개방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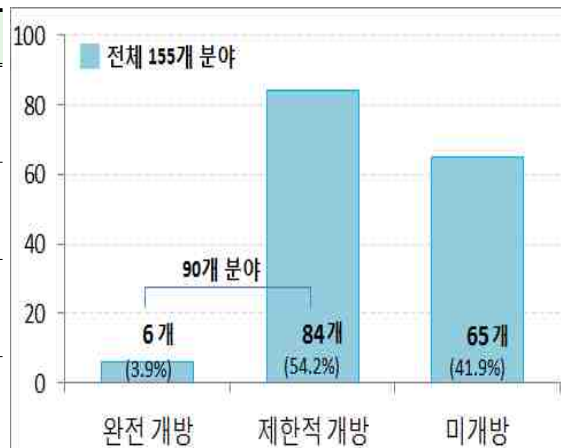
-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가지(3.9%) 분야임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서비스 등 84개(54.2%)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
- 반면,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했던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65개(41.9%) 분야는 개방하지 않음

< 주요국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

구 분	중국	한국	일본	EU20
종합지수	36.6	23.1	23.4	26.1
Mode1지수 (국경간 공급)	39.2	27.1	36.6	34.2
Mode3지수 (상업적 주재)	37.3	21.3	23.4	26.2
Mode4지수 (자연인의 이동)	75.0	75.0	60.0	60.0

자료 : World Bank.
주 : 0에 가까울수록 개방, 100에 가까울수록 미개방 상태를 의미함.

< 한중 FTA 서비스부문 중국측 양허업종수 >



자료 : 한·중 FTA 중국측 양허표를 참고로 현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전체 업종 수 대비 비중임.

【참고】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부문 개방정도 비교

주요 내용		
한국·중국 (201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개방 분야 : 6개 -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부수서비스, 금융정보제공·교환/금융자료처리 서비스 • 제한적 개방 분야 : 84개 -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크레이션 서비스, 금융서비스(손해보험 등),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등 • 미개방 분야 : 65개 -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운송 지상 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비교대상	한·중 FTA와 비교했을 때	개방정도
중국·뉴질랜드 (2009년 1월)	(개방분야) : 1개 -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투자지분 제한 분야) : 7개 - 환경서비스(폐수 서비스,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소음 저감 서비스, 위생 서비스) (미개방 분야) : 5개 - 시장조사, 직업소개·공급, 빌딩청소 등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크레이션 서비스	한중 FTA 보다 • 더 개방 : 1개 분야 • 제 한 : 12개 분야
중국·싱가포르 (2009년 1월)	(개방분야) : 1개 - 병원 서비스 (투자지분 제한 분야) : 1개 - 손해보험 서비스 (미개방 분야) : 2개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크레이션 서비스	한중 FTA 보다 • 더 개방 : 1개 분야 • 제 한 : 3개 분야
중국·스위스 (2014년 7월)	(개방분야) : 2개 - 연구·개발(R&D) 서비스, 항공운송 지상 서비스 (투자지분 완화 분야) : 1개 -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미개방 분야) : 2개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크레이션 서비스	한중 FTA 보다 • 더 개방 : 3개 분야 • 제 한 : 2개 분야
중국·호주 (2015년 12월)	(개방분야) : 4개 - 연구·개발(R&D) 서비스,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공항 운영 서비스 (투자지분 완화 분야) : 1개 -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미개방 분야) : 2개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크레이션 서비스	한중 FTA 보다 • 더 개방 : 5개 분야 • 제 한 : 2개 분야

자료 : 중국 측 양허표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북핵 문제

○ (현황)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역대 41번째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 한·중 정상은 1992년 수교 이후 상대국을 오가거나 제3국에서 매년 정상 회담을 개최⁴⁾하고, 양국 간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왔음
-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 관련 사항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 사안으로 취급
 - 특히 2003년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핵 문제가 자세히 반영되기 시작했고, 2008년 6자회담 좌초 이후부터 강력한 우려를 표명

< 역대 한중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북핵 관련 주요 의제 >

구분	주요 내용
1992.9.28(방중) (노태우 대통령, 양상훈 주석)	- 한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한중 국교정상화 합의 이후 한 달 뒤 한국 대통령 첫 방중
1998.11.12(방중) (김대중 대통령, 장쩌민 주석)	- 중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목표의 조속한 실현 희망'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사이
2003.7.7(방중)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	- 한중, '先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 2003년 북한의 NPT 재탈퇴 선언(2차 북핵위기) 이후
2005.11.16(방한)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	- 한중, 2005년 9.19공동성명 적극 찬성, 6자회담 지속성 다짐
2013.6.27(방중)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	- 한중,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다자대화 강화, 한반도 비핵화 견지' ▶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우려 표명
2014.7(방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	- 한중,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9.19공동성명 이행'
2017.11(제3국)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 한중, '북핵문제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

자료 : 한중 공동성명 및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992년 이후 40차례 열린 한중정상회담 가운데 북핵 관련 주요 회담만 정리.

4)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6회, 중국에서 14회, 나머지는 APEC 정상회의 등 제3국에서 실시되어왔음.

○ (예상 의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재확인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예상

- 한중 정상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더욱 돈독한 우의를 쌓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반대와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전망
 - 한편,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권유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특히,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인 만큼,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개발 방안 및 동북아슈퍼그리드 등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구상을 설명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 * 동북아 슈퍼그리드란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해 복수의 국가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공유하는 전력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망 연결을 통해 ‘원 아시아’를 추진한다는 전략임.

3. 시사점

- 첫째, 한중간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는 對 중국 전략 마련과 동시에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모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사드갈등 이후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하이테크 산업 중심뿐 아니라, 소비재도 고급화 추세가 가속될 전망
 - 아울러, 최근 우리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중국의 對 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하는 등 양국간 교역 감소에 대비한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 둘째, 우리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타당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보호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
 -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 외에도 투자분야 추가협상도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통해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응, 우리기업들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함
 - 특히, 투자분야 추가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와 같은 분쟁 중재 기제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이 신흥전략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극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을 최대 활용
 - 한국에 대한 중국의 그린필드 직접투자가 부동산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양국간 기술개발 협력, 스마트 제조 설비의 공동양산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 싱가포르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모델인 '중국(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시범사업(中新(重慶)戰略性互聯互通示范項目)⁵⁾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 생산, 물류 등 요소들의 이점을 고려한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이 ASEAN, 동유럽 등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조기지, 물류기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한중 간 금융부문의 역내 협력을 통해 환율안정을 모색하고 나아가 점차 양국 간 상호 금융 규제 완화 조치도 필요
 -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위안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 한중 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바탕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위안화 허브 유치에 전략적으로 재추진할 필요성도 있음
 - 우리도 QFII, RQFII 등 중국의 기존 자본시장 규제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요구로 對 중국 금융부문 진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함

- 다섯째, 관광 등 인적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개념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
 - 향후 관광 산업은 요우커에 편중된 마케팅에서 탈피, 개별 관광, 스마트 관광 등 고소득 관광객의 실수요에 맞는 혁신형 콘텐츠 개발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5) 싱가포르가 중국과 협력하여 충칭(重慶)에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편승하는 경제협력 모델임.

- 이에 따라, 이러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돕는 온오프 인프라 지원과 함께 싱가포르 등 기존 아시아권 관광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비전 재정립이 필요함

○ 여섯째,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의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함

-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서는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함

- 한국과 동일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맺은 호주(2015년 12월 발효)도 對 중국 서비스 수출이 한국과 비슷하게 여행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호주 등 국가에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큼

- 對 중국 서비스 교역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함

○ 일곱째,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정책 추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 확보가 필요

-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한 만큼 훈춘물류단지 활성화 등 기추진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함

· 기추진 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단초를 마련해야 함

· 훈춘물류단지 활성화는 환황해 경제벨트 실현의 첫 열쇠가 될 수 있음

중 국 경 제 팀 한 재 진 연구 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통 일 연 구 센 터 이 해 정 연구 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 용 화 연구 위원 (2072-6222, yhlee@hri.co.kr)